

“영리병원 특례 폐지·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교육의원은 제도 유지속 도의원 정원서 제도
인사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 확대키로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엔 녹지국 제정원 추진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돼 주목된다. 또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변경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진된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고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예고(리닝메이트)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사 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 확대해 정부부지사와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도 의회 동의를 얻

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부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등 형식이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아울러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들로만 구성(5명→7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즉 교육위원의 경우 분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전에 한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의견결 제한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을 둘러싼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 입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바꾸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3월 24일)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국토부, 제2공항 결정 환경부에 전가?
변창흠 장관 “여론조사결과 환경부 의견 듣겠다”
심상정 국회의원 “국토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여론조사는 환경부가 요청한 것으로, 환경부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정 심상정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지난 6년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국토부, 도지사, 도의회, 시민사회가 합의한 조사다. 두 기관 조사 모두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당초에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저희로서는 그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답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의견을 가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도 받아서 환경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에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변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심 의원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도민여론조사는) 2020년 8월 국토부가 제주에 가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계속되는 난개발로 제주도민 삶 개선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주발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국토부가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부미연기자



성경한 관광객들 2월 평균기온에 비해 따뜻한 날씨를 보인 22일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특수배송비 현실화, 국민 공감대 우선”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현실화 방안으로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관련기사 7면

제주와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특수배송비, 현실화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서료와 특수배송비와 관련, “국토부를 주관으로 한 도서 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조사가 필요하며,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택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체계를 만들어 부과하고 있고, 택배업체마다 요금표가 달라서 특수배송비가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결국 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서 산간지역 배송비에 추가적인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지지만

현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배송지 표기 의무화 관련 고시가 개정됐지만 이것이 배송비 가격 인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국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됐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에 이어 법적·제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전 국민들의 공감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경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기획운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고대희기자 bigroad@ihalla.com

2021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날입니다

- 제주도 최초 순적립금 100억 돌파
- 동일인 대출한도 42억
- 2020년 결산결과 3억 배당 (출자배당+이용고배당)
- 2021년 우수회원 도내연수 시행예정(500명) (추진기간내 거래실적 우수회원 선정)

이렇듯 저희 산남새마을금고가 도내 최고의 자산건전성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가능했기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성길 외 임직원일동

MG새마을금고

■ 본 점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58 (동홍동) TEL. 763-8585~9, FAX. 732-9603
 ■ 지 점 : 서귀포시 일주서로 329 (도순동) TEL. 739-1730,1740, FAX. 739-4714